

광주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180원으로 인상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 5.1% 반영 연금액 인상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3180원·부부 51만7080원

광주시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이 2022년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한 결과다.

기초연금지원 확대는 올해 1월부터 적용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1월 급여(25일 지급)로부터 단독가구 월 최대 32만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708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22만2970명 중 14만9231명(66.7%)에게 총 4804억 원

을 지원했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류미수 복지간강국장은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라며 “코로나19로 외부활동 등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한우가격 안정대책 선제 추진

전남도, 현안 정부 건의

전남도가 한우가격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에 현안 관련 지원 대책을 적극 건의했다.

전남도는 침체된 한우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료 구매 자금 무이자 지원 등 농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에 경영안정 대책을 전국 최초로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한우가격 하락이 예상되자 지난해 12월부터 농가의 흥수 출하 자체 독려를 시작으로 한우산업 안정대책 수립, 농·축협장과 유통업체·관계기관 간담회, 학교·기업 단체급식 한우고기 사용 확대 협조 등 자체적으로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료구매자금 무이자 지원 24억원 등 한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신규·기존사업을 확대해 27개 사업에 17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월 들어선 두 차례에 걸쳐 ‘2023년 축산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전남도 한우협회 회원농가와 전남도의회에 설명도 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 배합사료 가격 안정기금 조성과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불균형에 따른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도·소매가격 연동제 시행’ 등을 전국 최초로 건의했다.

또 한우가격 안정대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한우고기 군납 확대, 비축 사업, 수입 쇠고기의 한우고기 대체 공급 시 차액 지원 등 수급 조절 사업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기 시행도록 요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설맞이 할인판매 행사도 설 이후까지 지속 추진하고, 관계자 협의회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위원회 성과공유회

지난 17일 오후 시청 종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위원회 성과공유회’에 강기정 시장이 참석해 우수정책제안 시상을 한 후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 ‘스마트 청년농어업인’ 1만명 본격 육성…4조5천억 투입

10년간 농어업 7개 분야 60개 사업 추진

전남도가 세계로 끌어가는 전남 농어업 100년을 이를 ‘스마트 청년 농어업인 1만명’을 본격 육성한다.

전남도는 민선8기 도지사 주요공약인 ‘스마트 청년 농어업인 1만명 육성’을 위해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4조 5000억원을 들여 단계별 맞춤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공약사업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어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의 진입부터 소득 창출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치게 된다.

농업 분야는 ‘청년 유입을 위한 소득기반 확충’, ‘안정적 청년 고용과 거주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창업 지원’ 등 3개 분야 16개 사업에 1조 1788억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계획 수립에 앞서 정책 수요자 맞춤형 사업, 체감도 높은 정책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비롯해 청년농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을 통해 현장 의견을 촘촘하게 수렴했다.

이를 반영해 농업 분야에선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무량 농지 확보를 신규 사업으로 설계·지원한다.

스마트 청년농어업인 1만명 육성의 핵심사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11곳을 2024년부터 2031년까지 2㏊ 규모로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해 조성한다.

또 청농형 스마트팜 퍼키지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영농 승계가 어려운 선도농업인과 청년농업인 간 공동경영 방식의 ‘전남형 청년농 연수농장제’를 운영해 제3자 간 영농승계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종배 기자

광주시 미래 모빌리티산업 밀그림 그린다

모빌리티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용역 착수보고회

족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CES 2023에서 확인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대전환은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이미 현실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용역을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광주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소규모 대기 사업장 사전 기술진단제 도입

광주시, 대기오염물질 시설 사전 진단·성능 평가…설계 반영

소규모 대기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기술진단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광주시는 도급·도장·인쇄사업장 등 노후화 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 기술진단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35개 사업장에 208억 원을 지원했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사전 기술진단 없이 방지시설 교체 비용만 지원, 방지시설

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집장치 등이 개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기질 개선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보조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의 포집·이송·방지시설·송풍기 등 전체 시설을 사전에 진단, 성능을 평가해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사전 기술진단 제도를 도입해 대기오염물질 처리 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전 기술진단을 신청한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대상자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한다. 사전 기술진단을 회망하는 사업장은 2월 28일까지 광주시 기후환경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권형안 기자

“가뭄대책 속도…섬 광역상수도 앞당겨야”

김영록 지사 가뭄대책 보고회서 물 절약 캠페인 지속 당부

김영록 지사는 18일 도 재난종합 상황실에서 열린 가뭄대책 상황보고회에서 실국별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보고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섬 해수담수화, 해저관로를 통한 광역상수도 구축 등 가뭄 대책 사업 조기 완료와 가정·기업의 물 절약 동참호소를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가뭄은 기상 관측 아래 최악의 상황으로 2022년

누적 강수량 844㎜를 기록, 평년 대비 61%에 머물렀다.

1월 현재 광역 상수원 저수율은 33.6%(주암댐 29.3%·수어댐 89.7%·평립댐 32.2%·장흥댐 34.7%)이며, 지방 상수원도 45.4%에 그치고 있다.

특히 완도 5개 섬 지역은 수원지 저수율이 낮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찌감치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박종배 기자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전원주택 · 조립식주택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010-6265-0057



철골 공사
조립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축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

